이만의 환경부 장관 지방신문협회 공동 인터뷰

"영산강 하구언 철거 검토"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월15일 건국 60주년 기념식에서 '저탄소 녹색 성장'을 온실가스와 환경 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신 성장 동력'으로 제시했다.

광주일보 등 전국 주요 일간 신문으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은 지난 24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에서 이만의 환경부장관을 초청, 녹색 성장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지난 24일 한국지방신문협 공동취재단과의 인터뷰에서 "영산강 뱃길 복원은 환경 훼손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며 "경제성 등을 감안, 지역에서 예산을 신청하면 정부가 지원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신문협 공동취재단〉

퇴적물 많고 수량 부족
영산강 '자정 기능' 상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부의 역할은

▲환경 교육과 녹색 인재 양성, 지자체 지원 등 국민 스스로가 녹색성장을 실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녹색 성장이 '신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녹색 기술 개발과 녹색 산업 육성에도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의 하나로 녹색 성장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영산강 등 4대강 뱃길 복원은 오히려 환경을 훼손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영산강의 경우 너무 퇴적이 많고 수량이 절대 부족, 수질이 최악이다. 수량 확보부터 해야 수질개선이 된다. 또, 하구언으로 인한 유속 둔화 등으로 시간이 갈수록 퇴적율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영산강 뱃길 복원은 환경 훼손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우선 순위를 정해 강 기능을 회복한 뒤 식생 등 생태 개선이 고려하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 앞으로 경제성 등을 감안, 지역에서 (예산을) 신청하면 정부가 지원할 것이다.

-하구언에 대한 개선책은

▲하구언은 농촌공사가 관리하고 있으며 정확한 실태 파악이 안 된 상태다. 그러나 농업용수와 일반 수질은 다른 것 아니냐. 사실 농업지역에서 비료와 농약을 기준대로 사용하는 지역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하천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크다. 하구언을 막으면 단순히 퇴적물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염원도 쌓인다.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하구언에 대한 개선책도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하구언을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바다는 자정작용이 있다는 점에서 강에서 나오는 오염원 정도는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강 자체의 자정기능이 부족한 만큼 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구언을 트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뱃길 복원의 경제적 효과는

▲세계적으로 그린 뉴딜이라는 개념이 쓰이고 있다. 그린뉴딜은 녹색성장과 맞닿아있다. 정부가 공공기능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나서자는 것이다. 다만 예전처럼 사회간접자본을 앞세우지 말고 환경정책을 앞세우자는 게 그린뉴딜의 개념인데, 뱃길복원사업도 같은 맥락이다.

환경교육·지자체 지원 등
녹색성장 인프라 구축 역점

-탄소거래소 유치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

▲증권선물거래소와 MOU 체결을 통해 진행중이다. 일부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들어가고, 2010년부터는 탄소거래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본다.

-MB 정부의 호남 인맥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과는 특별한 친분은 없었다. 그러나 호남이 (정치적으로) 편식하면 지역이 손해보고 후대들이 문화적으로 취약해진다. 다양성 속에서 성장해야 리더도 나오고 나름대로 제 몫을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을 돕게 된 것은 이러한 배경이 작용한 것이다.

/임동욱기자tuim@kwangju.co.kr

이만의 장관 ▲담양 ▲광주제일고 ▲조선대 영어영문학과 ▲서울대 환경대학원 ▲광주광역시 부시장 ▲행자부 인사국장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행정비서관 ▲환경부 차관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안전 최우선… 차분한 철수 유도"

정부 '비상 상황반' 구성
개성인력 철수대책 마련

정부는 북한이 다음달 1일부터 남북간 육로통행 제한·차단 조치를 강행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비상상황반을 구성하고 현지 상주인력의 철수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25일 "오늘부터 12월 초순까지 김천식 통일정책 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각 실국별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비상상황반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북측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에 따라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등 공단 지원기관과 개성 내 기업체들의 철수 대책을 각 부문별로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주인력 50%가 감축 대상이 된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북측 근로자 통근버스 운행, 전기·용수 공급 등 공단 인프라 담당 인력 위주로 잔류 대상을 선별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철수할 인력도 예고된 체류시한인 오는 30일까지 가급적 오래 남아 지원 업무를 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북측이 내달 1일부터 개성관광과 남북 철도운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가운데 25일 오후 개성공단 화물열차가 운행을 마친 뒤 도라산역에 정차해 있다. 화물열차는 우리측 도라산역과 북측 판문역을 매일 한차례 왕복 운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오전 8시 현재 개성에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 관계자 38명, 공단 제조업체 관련 인원 750명, 은행·병원·편의점 등 이른바 13개 '봉사업체'관계자 50명, 9개 건설업체 관계자 201명, 현대아산 및 협력업체 직원 553명 등 우리 국민 1천592명이 체류하고 있다.

정부는 또 다음달 1일부터 운행이 중단되는 문산-봉동 구간 경의선 철도도 이달 말까지 예정된 운행 일정을 소화한다는 복안이라고 정부 소식통은 전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남북경협협의사무소 폐쇄와 기업인들의 육로 통행 차단 조치에 따라 경협사업자들이 입게 될 타격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민주-민노 "대북 정책 공조"

정세균-강기갑 대표 회동
"사태 악화 더는 좌시 못해"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위한 공조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날 회담에서 강 대표는 ▲긴급 야당대표회담 개최 ▲국회차원의 비상시국회의 개최 ▲남북관계특위 구성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안 공동발의 ▲남북관계개선촉구 결의안 채택 등에 민주당이 나서줄 것을 요청했으며 정 대표는 이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정 대표는 회담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비핵개방 3000' 정책을 폐기하는 등 대북정책을 바꾸고 6·15 선언과 10·4 선언의 정신을 지킬 것을 주장했다"면서 "어차피 정부도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문제는 경제문제이기도 한데 지금처럼 사태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 없다는 점은 명약관화하다"면서 "17대만해도 한나라당 내부에서 바른 소리하는 의원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의원들이 있는지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경제도 거꾸로 가지만 남북관계도 거꾸로 가고 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10년간 공들여 쌓아온 탑을 위에서부터 허무는 것도 아니고 기초를 허물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남북관계가 거꾸로 돌아가 버리면 다시 제자리로 돌리기는 몇배 힘들다"면서 "행정부가 할 수 없다면 바위들이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도록 고임돌 역할을 정당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